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	 금융감독원
<b>보도</b>		2019.10.23.(수) 조간		배포	2019.10.22.(화)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성기(02-2100-2990)		<b>담 당 자</b>	이지현 사무관 (02-2100-2993)	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영주(02-3145-6770)			이종오 팀장 (02-3145-6773)	
	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 최병주(02-739-3779)			정성문 부장 (02-397-8640)	

## **제목 : 저축은행의 「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」이 확대됩니다.**

- ◆ **연체 전·후 단계별\*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**  
\* (연체 前) 취약차주 사전지원 → (연체 3개월 미만) 프리워크아웃 → (연체 3개월 이상) 워크아웃
- ◆ **「취약차주 사전지원」 대상<sup>1)</sup> 및 「워크아웃」 원금감면 대상채권<sup>2)</sup> · 원금감면 한도<sup>3)</sup> 확대**
  - 1) (현행) 가계 → (개선) 가계·개인사업자·중소기업
  - 2) (현행)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→ (개선)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
  - 3) (현행) 개인신용대출의 50~70% 이내 → (개선) 개인·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~90% 이내
- ◆ **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<sup>1)</sup> 및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<sup>2)</sup>**
  - 1) 상품설명서,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안내
  - 2) (현행) 가계 주택담보대출 → (개선) 가계·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

### **I. 추진 배경**

- 저축은행업권은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'01.10월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
  - 단순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,
  - 지원 관련규정이 산재되어 있고, 지원대상·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곤란
- 최근,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  -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·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

## Ⅱ. 주요 개선내용

### 1 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

#### 가. 현황

□ 저축은행업권은 취약·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,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·자율 시행중이나,

- 지원내용이 대출규정,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되어 있고, 지원대상·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렵고,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도 저조\*

\* '18년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'18년중 지원실적은 7,139건 631억원 수준

#### 나. 개선

□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「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」 마련

- 대출규정,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을 「운영규정」으로 일원화하고,
- 채무자 유형별(연체 우려자 / 단기 연체자 / 장기 연체자),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①취약차주 사전지원, ②프리워크아웃 및 ③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

#### < 채무조정 지원체계(안) >

구 분	연체 前		연체 後	
	① 취약차주 사전지원		② 프리워크아웃	③ 워크아웃
지원대상	가계,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			
	-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- 연체발생우려자		-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	-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
지원방안	공통		- 만기연장 - 장기전환 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	
	제도별		-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- 담보권 실행유예*	- 원금,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- 성실히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
			-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* -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	

※ 다만, 사전경보체계, 채무변제순서 선택권, 담보권 실행유예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, 채무자의 취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

## 가. 현황

- 「취약차주 사전지원」 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되어 있고, 「프리워크아웃」 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곤란

- 또한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\*임에 따라,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노력 필요

\* '18년 채무조정 총 지원금액(631억원) 중 원리금 감면액(79억원)은 12.5% 수준

## 나. 개선

## ①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

- 「취약차주 사전지원」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\*하여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

\* 사전경보체계는 가계·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

## ②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

- 「프리워크아웃」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\*

\*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연체금리 인하(약정금리+3% 상한),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(단,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, 담보권실행 前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 검토)

## ③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

- 「워크아웃」 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를 확대

## &lt; 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&gt;

구분	현 행	개 선(안)
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	-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- 1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	-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- 2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
원금감면 기준금액	-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	-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
원금감면 한도	- (개인신용대출) 50% 이내 단, 사회취약계층은 70% 이내	- (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) 70% 이내 단, 사회취약계층은 90% 이내

## 가. 현황

□ 연체우려자, 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제도를 SMS, E-Mail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,

- 가게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\*을 실시

\* 담보권 실행 前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사전안내 및 1회 이상 상담, 상담시에는 담보권 실행사유, 이용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및 법적절차 착수 후 정상화 방안 등을 안내

## 나. 개선

### ①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

-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,
-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\*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

\*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前 7영업일 이내 발송

### ② 담보권 실행 前 상담의무 대상 확대

- 담보권 실행 前 상담의무 대상을 가게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\*

\*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

### Ⅲ. 향후 계획

□ 저축은행중앙회는 「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(중앙회 표준규정)」을 확정하고, 10월말 시행 예정

□ 저축은행업권의 취약·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\*하도록 유도

\*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우수 지원사례 공유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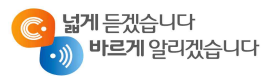
○ 아울러, 저축은행중앙회\*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

\*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(10.10.)하고,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 실시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